

G-Welfare Weekly Report

01 중앙정부 정책동향

1. 위기가구 발굴 위한 정보연계 확대한다

01 주요 내용

- 보건복지부는 「사회보장급여법*」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
 - 지난해 7월 발표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의 일환으로 위기가구 관련 정보연계를 확대하고, '18.12월 개정된 「사회보장급여법」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
- 시행령 개정안은 위기가구 발굴 정보수집 범위 확대, 자살자·자살시도자 가구 중 위기가구 기준 마련 등
 - ① 위기가구 발굴 정보수집 범위 확대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정보를 27종에서 30종으로 확대
 -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, 휴·폐업사업자 정보,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를 추가로 수집
 -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단축(6개월 → 3개월), 신고의무자 확대(공동주택 관리자 등)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별도 추진
 - 현재 연계되는 정보 중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기간 단축(6개월→3개월), 자살시도자·자해시도자 정보 확대(개인→가구)
 - ② 자살자·자살시도자 가구 중 위기가구 기준 마련(안 제6조의2 신설)
 - 자살예방센터,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정보를 보장기관에 제공하고, 보장기관이 이 중에서 경제적 위기 등을 판단해서 지원
 - ③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마련(안 제28조 신설)
 -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통보된 금액의 30% 범위 내, 1인당 연간 5,000만 원 이내
 -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경우, 타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은 제외
- 시행규칙 개정안은 분기별 발굴조사 방법, 절차 등을 포함
 - 보장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다음해 3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
 - 부정수급 발생현황, 유형, 사후관리 등을 조사하고,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

*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*입법예고 기간 : 1.30~3.11

02 경기도 시사점

- 확대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강화 및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민-관 협력적 방안 마련이 필요
 - 최근 사망한 망우동 모녀처럼 공과금과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경우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인적자원을 활용한 발굴 노력을 병행·지속해야 할 것임

01 중앙정부 정책동향

2.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, '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

01 주요 내용

- 정부는 1월 30일(수),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정책 전반을 논의
 - ‘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’과 ‘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’를 심의하고, ‘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’과 ‘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’을 보고·논의
-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** : 2018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
 - 2018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, △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등 13개 법령 일괄 개정, △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·발표, △장애인연금 인상(20→25만원), △평창 패럴림픽 계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
 - 올해는 △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자립 지원을 위한 ‘(가칭)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수립, △ ‘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(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)’ 이행, △장애인연금 30만원 조기인상(25→30만원), △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규 건립(30개소) 등

〈표〉 보건복지분야 장애인정책 '18년 실적 및 '19년 계획



*그림출처 : 국무조정실, 국무총리비서실, 보도자료 (1.30.일자)

-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** :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며, 3월에 제3차 보고서를 제출
 - 회의에서는 △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 △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최소화 △성년후견제도의 당위성 여부 △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가입 제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
-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('19~'22년)** 논의
 - 인천전략은 한국이 주도하는 “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” 의 행동전략으로, 우리나라는 1차 중국, 2차 일본에 이어 아태 62개국의 선도국가로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
 - 인천전략의 10개의 목표인 빈곤, 정치, 접근성, 사회보호, 교육, 양성평등, 재난, 통계,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2022년까지의 성과목표를 제시
- ‘장애등급제 폐지’ 추진방안** : 올해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, 보조기기, 거주시설,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부터 단계별로 시행
 - 장애등급제 폐지는 종전의 1~6등급 체계를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과 ‘심하지 않은 장애인’으로 단순화하고,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·지원

02 경기도 시사점

- 경기도 장애인구 수*와 급증하는 장애인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업무 조직 확대와 적정 인력 확충이 요구됨
 - 여러 부서에 산재한 서비스를 통합관리하고 신규 서비스를 개발·지원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
- ※ 경기도는 1개과/5개 팀이 장애인 업무를 총괄(서울은 2개과/7개 팀을 운영)

*경기도 장애인구는 2017년 기준 533,259명으로 서울의 1.4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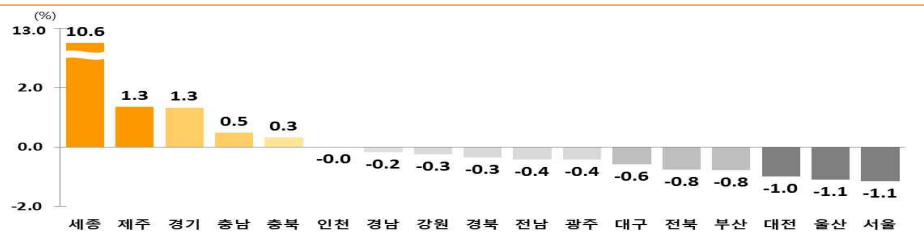
02 시도/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

1. 2018년 국내인구 이동통계

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'2018년 국내인구 이동통계'를 바탕으로 시도별 순이동 현황을 살펴봄

- 전국의 이동자 수는 729만 7천 명으로, 전년대비 2.0%(14만 3천 명) 증가
 - 시도내 이동률은 9.5%로 전년대비 0.2%p 증가, 시도간 이동률은 4.7%로 전년과 유사
 - 연령별 이동률은 20대(22.4%)와 30대(21.5%)가 가장 높음
- 시도별 순유입률은 세종과 제주 경기, 순유출률은 서울과 울산이 높음
 -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아 순유입을 보인 시도는 세종(10.6%), 제주·경기(1.3%) 등 5개 시도
 -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순유출 시도는 서울·울산(-1.1%), 대전(-1.0%) 등 12개 시도
- 경기·세종·제주는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, 부산은 전 연령층에서 순유출
 - 서울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, 대전은 80세 미만 전 연령층에서 순유출 됨
 - 20대는 전북(-4.3%), 강원전남(-3.9%) 등 12개 시도에서 순유출되고 세종(14.9%), 서울(2.7%), 경기(1.5%) 등 5개 시도에서 순유입 됨
 - 30대는 서울(-2.8%), 대전(-1.8%), 부산(-1.5%) 등 11개 시도에서 순유출되고 세종(14.1%), 제주(3.4%), 경기(2.6%) 등 6개 시도에서 순유입 됨
 - 40~50대는 서울(-1.6%), 대전(-1.0%), 울산(-0.7%) 등 7개 시도에서 순유출되고 세종(9.1%), 제주(1.5%), 충남경기(0.9%) 등 10개 시도에서 순유입 됨
 - 60대 이상은 서울(-1.7%), 부산대전(-0.5%) 등 7개 시도에서 순유출되고 세종(6.2%), 경기(1.1%), 충북충남(0.6%) 등 10개 시도에서 순유입 됨

〈그림〉 시도별 순이동률, 2018



- 전입사유는 주택(40.0%), 가족(23.3%), 직업(21.0%) 순으로, 전년에 비해 직업으로 인한 이동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(6만 2천 명)
 - 세종·경기의 주된 순유입 사유는 주택, 제주·충남·충북은 직업이며, 서울·대전의 주된 순유출 사유는 주택, 울산·부산 등 10개 시도는 직업으로 나타남
- 경기도는 순유입이 많지만 서울과 인접지역으로, 주거지와 활동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정주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

2. 재단 주요사업 안내

사업명	주요내용
제3기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시행결과 설명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시/장소 : 2019. 2.11.(월), 15:00/ 경기도인재개발원 413호 • 참석대상 : 시군 공무원, 사회보장협의체 담당자 등 100명 • 내용 : 2018년도 시행결과 평가 결과, 향후 시군 지원 계획 등 • 문의 : 정책연구실 경영전략팀(☎267-9401)

03 FACT CHECK

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건강도 나쁘다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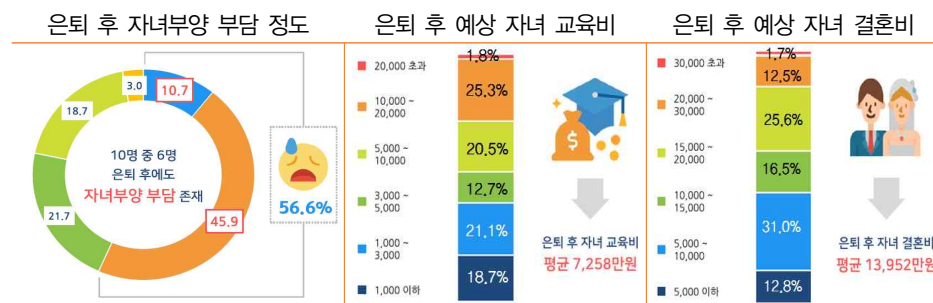
- 핀란드와 영국의 공동연구진의 연구 결과*에 따르면,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해당 연구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수량적으로 평가하고, 이를 매개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45만 명을 평균 6.5년 동안 추적 조사
-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은 경우(0점)에 비해, 사회적 고립이 심해질수록 사망 위험은 1.36배(사회적 고립 1점), 2.01배(2점), 3.38배(3점)로 점차 높아짐
 - 또한 외로움이 없는 경우(0점)에 비해 외로움이 있는 이들의 사망률은 각각 1.25배(외로움 1점), 1.59배(2점) 높음
- 그러나 사회적 고립은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, 건강행동과 사회경제적 요인, 주관적인 건강 수준 등의 매개요인이 각각 30%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이들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사회적 고립에 따른 초과 사망 정도는 64%가량 감소하며,
 - 외로움과 관련한 사망률 증가는 특히 주관적인 건강 수준, 우울 증상의 영향이 컸음
- 결론적으로 보면, 사회적 고립에 의한 사망은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적 변화, 건강행동과 우울 증상에 대한 개입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미
- 1인가구와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·확장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

*관련기사 : 프레시안. 2018.9.28. 일자 기사

*논문 원문 링크: <https://www.ncbi.nlm.nih.gov/pmc/articles/PMC5463031/>

04 통계로 보는 복지

자녀 교육, 결혼... 노후생활 영위에 큰 부담



자료: 보험개발원(2019), 2018 KIDI 은퇴시장 리포트.

- 보험개발원의 은퇴시장 설문조사 결과, 4050세대 중 은퇴 후 자녀 부양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56.6%이며,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도 10.7%를 차지
- 은퇴 후 예상하는 자녀 1인당 교육 비용의 평균은 7,258만원
 - 그러나 1억 ~2억원이라는 응답이 25.3%로 가장 많고, 1천만원 이하라는 응답도 18.7%를 차지하여 예상 교육비는 편차가 큰 편
- 예상하는 자녀 결혼 비용은 1인당 평균 1억3,952만원 수준이며, 자녀 수에 따라 더 커질 전망

*단위 : %, 만원

*그림출처 : 해당 보고서 자료를 일부 편집